

민주지도부, 李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 "3월 임시회 열 것"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 발언 이어져 정청래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것" 박홍근 "3월 임시회서 '김건희 특검'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7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확보해두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에서는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내려놓으라 공세 중이다. 그런 말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형사 불소추권을 내려놓겠다 말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제시된 내용을 입증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 최고위원은 "(검찰은) 이 대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쓰지 못했다"며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 어디로 실종됐나. 428억원 나중에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실은 공소장에 아마 쓰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 검찰에서 아무리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해선 안 된다"며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바느질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배임이라 주장한다.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일부만 환수했으니 손해 끼쳤다는 주장"이라며 "도대체 70% 환수하는 게 적정하다는 검찰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5503억원의 환수금액을 부정하고 1830억원이라고 애써 환수금액을 축소하는 것도 괴이하지만, 이익의 일부밖에 환수 못 했으니 유죄라는 논리는 더욱 괴이하다"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여당을 겨냥한 언급도 있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3월부터 국회를 안 열겠다고 아이처럼 떼를 쓴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가 구속되면 나라살림 더 나아지나, 역대급 무역적자가 좋아지나, 물가 폭등이 좋아지나, 서민 난방비 폭탄 해결되나"라며 "집권여당 대표쯤 되면 야당 대표에게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해 재판하라. 우리는 국회에서 우리 할 일을 하겠다. 우리는 국민을 돌보겠다. 이런 대국적 자세를 흉내라도 내보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도 열겠다는 입장



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나태와 발목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며 "공분이 끊이지 않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여당을 겨냥해 "대통령이 협치를 포기했으면 여당 지도부라도 국정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건만 너나 할 것 없이 '윤사부일체'

로 야당 탄압에만 몰입해서야 민생은 누가 돌보고 협치는 누가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기야 여당임을 아예 포기했는지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자고까지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받드는 사당화 대회 결과를 온전히 주목받게 하려고, 또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 여사 추가조작 의혹의 특검 추진 무산시키려는 알뜰한 속내와 정치적 셈법을 우리 국민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이재명, 北 도발에 "강경대응 고집하면 민생경제 수렁"

"평화가 경제...말폭탄은 누구나 던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과 태도"라며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안 그래도 최악인 민생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ICBM을) 강력히 경고하고 규탄한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평화가 경제다. 말 폭탄은 누구나

던질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건 평화"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민생에 고통받고 안보 때문에 걱정하는데 정부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마치 동네 아이들 시비 걸듯 정쟁만 일으키고 있다"며 민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일촉즉발 위기"라며 "물가가 오르고 소득은 줄어든다. 내수 위축과 수출 부진이 심화 가운데 정부가 결국은 경기 둔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남발해왔던 장밋 희망 고문을 이제 인정할 것"이라며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미 200억 달러에 육박한 무역적자는 반등의 기미가 없고 소비와 내수 또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 1% 성장률도 깨질 수 있다는 경고가 사방에서 쏟아지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강행 의지도 밝혔다. 이 대표는 "노동자의 합법 파업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와 안전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합법 파업 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율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다수의 국민은 노동자고 정치는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여당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롯한 대한민국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재환기자

이상민 "李, 檢 기소될 경우 대표직 물러나야"



대표적인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기소되면 물러나야 한다"며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당을 끌어들이는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과의 일대일 회동을 이어가면서 민심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고, 곧 이 의원도 만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 대표를 만나면 어떤 조건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법리스크 관련, 당과 분리해 개별 대응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계

획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표명한 대로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개별적으로, 또 정치적인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차갑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소되면 당헌 80조에 따라 물러나라고 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만나는 게 그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는 27일 예정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의원은 "이 대표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강성 그룹도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검찰의 수사 태도, 지금까지 믿음을 주지 못한 행태 이런 것을 볼 때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 많다"고 설명했다.

구속 사유도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업무상 배임, 제3자 뇌물죄는 다 쟁점이 많은 것"이라며 "배임액수가 4000억원 정도라는데 그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